

‘광주형 일자리’ 막판 돌파구 열리나

광주시, 지역노동계 답변서
44시간 근무·초임 3500만원
현대차와 협상 참여도 수용
노동계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지역노동계 불참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광주시가 지역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는 등 막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월 말에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탓에 주저하고 있는 지역노동계를 설득하면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차를 끝까지 붙잡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지역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중재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시에 전달한 바 있다.

현대차 투자 유치 관련 광주시 요구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광주시 출자자), 현대자동차(주), 지역기업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을 자기 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으로 설립하고, 여기에 광주시가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19%(534억원)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대차의 위탁 물량을 생산하며, 고용인원은 정규직



한·프랑스 정상 만찬 초청받은 광주 대광여고생들

광주 대광여고 박선옥 교감, 불어담당 양수경 교사와 학생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밤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불 정상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했다. 대광여고는 프랑스학술훈장을 받은 양 교사와 학생들의 불어사랑을 계기로 프랑스 대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 대광여고 제공>

1000여명”이라고 덧붙였다.

부속협정서(안)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적정임금과 관련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44시간, 평균초임연봉 3500만원을 최소한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체계 및 수준은 신설법인인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신설법인 설립 후 법인이 시행하므로 용역과정에서도 노측 등 참여를 보장했다. 주가·보육·문화 등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기위한 공동복지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요구안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시는 “현대차와 투자협상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된 사항은 아니며 현재 논의 과정에 있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잠정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재논의에 대해서도 “노동계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노동계의 투자협상단 참여 요구도 수용했다. 시는 “앞으로 노동계의 원활한

의견 반영을 위해 광주시 투자 협상단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게 되므로 협상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들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내는 등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성하고 교당단과 광주상공회의소, 직업계 고교 교사단과 학부모들이 이어 광주시민단체총연합, 노인회 광주시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투자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노동계도 계속 만나고 있다”며 “지역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지만, 지역 각계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자’→‘순직자’

광주시민을 ‘적’으로 분류
보훈처 국감서 시정 요구
피우진 처장 “협의 진행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에게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족들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적’이 아닌데,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

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 차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전쟁이었던”고 묻고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 23명을 당시 사망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순직자’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차관은 “5·18은 전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계엄군 사망자에 관해 새로운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감에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도 장 의원의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 신청을 위한 권익위 조사’ 요구에 “위법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지난 8월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고 9월에는 관련 공문을 보내서 5·18 당시 숨진 계엄군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전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유입 해양쓰레기 매년 5000t씩 쌓인다

9만t 육박 특단의 대책 시급

전남지역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해도 매년 5000t 넘게 쌓여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쌓인 해양쓰레기는 9만t에 육박,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전남도가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 의뢰한 ‘전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용역 최종결과’에 따르면 매년 전남도내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최소 1만7915t에서 최대 3만5510t으로, 평균 2만6713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 17만6807t 가운데 전남은 23%인 4만575t을 차지하고 있다.

어선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유입 쓰레기가 최대 1만3694t, 외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최대 2만1120t으로 산정됐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흘러드는 초목류 5047t을 포함하면 최대 4만t을 넘어선다. 반면, 2016~2017년 해양쓰레기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은 연간 2만1589t의 쓰레기를 수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간 평균 쓰레기 발생량과 평균 수거량을 비교할 때 5124t의 쓰레기가 매년 증가해 잔존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섬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유·무인도의 해안쓰레기 현량량 현장조사 결과, 현량량은 약 8만7482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해외유입량이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현행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처리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확보하고 있지만, 국비를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수거, 처리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환경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준해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국비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송학산 높은정기 우러러 보며~

**대촌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체육대회**

일시 ▶ 2018. 10. 21(일) 08:0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10-3610-4706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남순복

광주일보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 순천 독립운동지사 벽소 이영민 ▶18면
KIA 한승혁·임창용·정성훈·임기준 등
- 아쉬움과 설렘 외일드카드 현장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